

국적불명 배달음식 ‘찐찐’

보쌈·피자·족발 등 원산지표시 안돼 소비자들 불안

평소 야근 때문에 야식 등 배달음식을 자주시켜 먹는 회사원 최모(40)씨는 최근 찐찐한 기분을 지을 수 없었다.

광주시내의 한 야식업소에서 저녁 식사로 보쌈을 시켜 먹었지만, 음식 용기와 포장에 살펴봐도 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시민들이 원산지 불명의 음식을 계속 먹는 데도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지난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제도가 배달음식에까지 확대 시행돼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닭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배달음식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 확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피자, 족발, 보쌈, 탕수육, 돈

가스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들은 제대로 표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치킨뿐 아니라 피자까지 ‘원산지 자율 표시제’를 도입해 권고 시행하고 있다.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배달피자 원산지표시 참여업체의 우수사례를 설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 결과 대형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동참하고 있다. 배달피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피자의 주 재료로써 축산식품인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이며, 표시방법은 배달상자, 홍보 전단지, 영수증 등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의 영세 배달음식 업체들은 자율 사항이다보니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의 한 중국 음식점 업주는 “배달음식도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의무사항도 아닌데다 중화요리 특성상 식재료가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최근 피자·족발 등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산로 일방통행 해제해달라”

송정지구 상인들 “상권 죽인다”... 왕복 2차선 요구

“광산로의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왕복 2차선을 조성해 버스로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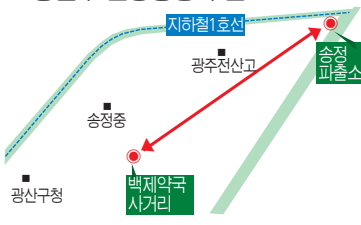
광주시 광산구 송정지구 상인들이 광산로(송정역~ 송정파출소역) 1.3km 구간 중 백제약국 사거리 등 일부 구간의 일방통행 해제를 각계에 호소하고 있다.

광산로변 상가 점주들은 “일방통행로의 지속과 홀·짝 정차제 시행은 유동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조치가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권을 살리는 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광산구청 인근에 위치한 상가의 경우 구청 공무원들의 이용이 많아 사정이 낫지만 그나마도 미미한 실정이다. 광산로 구간중 백제약국 사거리 ~ 송정 파출소에 이르는 지점의 50여 점포 주인들은 임대도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은 경영난을 견디

■ 광산로 일방통행 구간



지 못해 이주까지 고려하고 있는 등 도심 공동화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은 광산구보건소가 10여년 전 이주한 시점부터 경기 침체를 겪어 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도심 공동